고용노동부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4.(화) 국무회의 안건 보고 시 별도 공지

국가자격시험, 인공지능(AI) 활용 부정행위를 철저히 대비하고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

- 11.21. 경비지도사 시험부터 강화된 대책 즉시 적용, AI 부정행위 6건 적발
- 예산확보와 법령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추가 대책 완료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와 **한국산업인력공단**(이사장 이병훈)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**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**를 **근절**하기 위해 **시험 전·중·후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강화**한다.

그동안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주로 메모지나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방식이었으나, **지난 5월 스마트안경**을 이용한 **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에서 처음으로 적발되었고,** 최근에는 **세무사 시험**에서 **초소형 카메라와 개조한 계산기**까지 등장했다. 주로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**기존 방식만**으로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**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**가 있었다.

이에 **고용노동부는 11월 15일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**를 개최하고, **11월 19일 장관 주재 「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」 1차 회의**를 거쳐 **강화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추진**하기로 하였다.

부정행위 방지대책은 즉각 시행 대책과 **추가 보완 대책**으로 나누어 추진하며, **즉각 시행 가능한 대책은 시험 전 예방, 시험 중 적발, 사후 적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.**

우선 **시험 전**에는 휴대폰 등 **전자기기의 전원 차단 여부**를 **감독관이 직접 확인하여 수거**하고, 이에 더하여 **매 과목 시험 시작 전**마다 **무작위로 수험생에 전화**를 걸어 **전원이 차단**됐는지 **재확인**한다.

그리고, **금지 물품 소지 시 형사처벌**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**명확히 고지**하고, **감독관 교육도 강화**한다.

시험 중에는 **부직포 가리개**를 착용토록 하여 **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차단**하고, **감독관을 추가 배치**한다. 또한, **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는 스마트앱**을 활용해, **첨단기기**를 이용한 **부정행위 적발을 강화**한다.

이와 같은 **즉각 시행 대책**은 지난 **11월 21일 실시한 경비지도사 시험**(응시자 11,554명)부터 **바로 적용**했다. 그 결과, **태블릿PC·스마트워치 소지, 휴대전화 전원 미차단** 등 총 **6건의 부정행위**를 **적발**했다.

시험이 끝난 뒤에도 **범죄는 끝까지 추적**한다.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, 현재 **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6년에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**에 대해 **전수조사를 진행**하고 있으며, **부정행위 제보센터도 운영**하고 있다. 전수조사와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확인되는 **의심 사례**에 대해서는 **면밀히 분석**해 필요한 경우 **수사를 의뢰**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.

아울러, **올해 남은 시험**부터는 **시험지·답안지에 "부정행위 시 최대 징역 2년"**이라는 **경고 문구도 표기**하여 **경각심**도 더 높인다.

다음으로는, 예산확보와 법령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완료할 계획이다.

스마트기기 전담 감독관을 확대 배치하고,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**전문 인력풀로 관리**한다.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**전파탐지기를 도입**하고, **전원이 꺼진 상태**에서도 **기기를 탐지**할 수 있는 **추가 적발 수단**(비선형접합탐지기 등)도 **확보**해 나간다.

사후 적발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. **전용시험장을 확대**하고, **임차시험장에는 이동형 CCTV와 감독관 보디캠(부착식카메라)을 도입**하는 등 **시험 현장을 사후에도 확인**할 수 있는 체계도 강구한다.

시험 결과의 투명성도 높인다. 국민들이 합격 결과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**수석·차석 합격자 점수** 및 **전체 수험생**의 **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**한다.

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. **기술자격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**으로 늘리고, **형사처벌도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**으로 상향한다. **전문자격은 관계 부처와 협의**해 응시 제한 기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, **형사처벌 규정도 신설**할 계획이다.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**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**한다.

아울러 **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 정례협의회**를 **운영**하고 인력공단의 **전담 연구기능을 강화**하여 **적발 사례와 탐지 기술을 공유**하는 등 **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**, 정부 전체의 대응 역량도 제고한다.

나아가 AI 시대에 맞춰 국가자격제도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. AI 시대에 걸맞게 실기형·면접형 등 **시험방식을 다양화**하고, **불필요한 자격은 과감하게 정비**한다. **현장 경력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인증**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**자격검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**할 계획이다.

고용노동부는 **"부정행위에 철저히 대비하고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"**라는 원칙 아래, 국가자격시험의 **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**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, **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**으로 하는 **「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를 통해 연말까지 세부 이행방안**을 **마련**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재국 (044-202-7286)
		담당자	사무관	권보미 (044-202-7293)
			사무관	박만수 (044-202-7290)